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인종강박증, 대한민국을 털어라!

통권 제14호 | 2011년 제3호

계간 Act On



진보넷 회원 모집 웹 카드

“진보넷이 드리는 이 모든 특전, 오직 진보넷 회원들께만 드립니다.”

잊지 말고 지켜보자

sk 커뮤니케이션즈의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의 도용을 방지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 "명의도용의 원인은 다양한데 실명제를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 아니면, 실명제를 통한 명의도용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나마 최근 방통위 국감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답변했지만, 이것이 국감장에서 난감한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답변일지, 혹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진정 고민하고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포털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그랬듯, 전자주민증 역시 '인증'에 대한 강박을 키울 뿐입니다. 전자주민증으로 확인된 인증 정보는 실명제보다 더욱 방대한 '개인의 행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지요. 작년 8월~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신상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사건은 전자주민증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제 언론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잊지 않고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지, 기업들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폐기되는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지...

오병일 @ antiropy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4호 | 2011년 제3호

발행일 2011년 9월 28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오병일
편집	하주영
표지	박명훈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antiropy@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인증강박증, 대한민국을 털어라!”

Section 001. 인증강박증, 대한민국을 털어라!	… 07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오병일	… 08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 -그 원인과 대책 / 김기창	… 19
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 장여경	… 25
Section 010. 이슈	… 30
주민번호 변경 소송인단 모집합니다! / 진보넷	… 31
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 장여경	… 37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조동원	… 39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조동원	… 46
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 장여경	… 54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 56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 64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70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 79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 91

Section 001. 인증강박증, 대한민국을 털어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오병일
거듭된 개인정보 유출 - 그 원인과 대책 / 김기창
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 장여경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af 활동가)

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2006년 2월, 게임사이트 리니지에서의 120만 명 규모의 명의도용,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0년 2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지난 2011년 7월 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해킹에 의해 회원 3,500만 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올해 4월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175만 건 유출은 사소해보일 정도다. 이제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는 점은 이미 지난 2008년 옥션 사태 당시부터 지적되었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다

지난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옥션 사태 직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4월 24일)

올해 내놓은 방안에서 방통위는 현재의 문제점으로 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② 기업의 보호 조치 미흡, ③ 이용자 권리행사 부족을 짚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해킹이나 내부자 공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어찌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0% 완벽한 보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거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유출될 개인정보 자체가 없으니 이보다 완벽한 보안이 어디 있겠는가. OECD 가이드라인과 UN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1원칙이 ‘수집제한의 원칙’ 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2008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방통위는 2008년 발표한 대책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관행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됨’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후, MSN, 아마존닷컴 등 외국 주요사이트는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수집’ 하는데 반해, ‘국내 사이트의 73% 이상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06)’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하고, 일반적 포털 등은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 현행 선언적 규정인 개인정보 필요 최소한 수집 규정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벌칙 적용 등 제도 개선 추진

-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체수단(i-PIN 등) 제공 의무화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때 발표된 대책이 이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 해킹을 당한 SK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한 많은 포털들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등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대다수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2011년 8월 16일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그것의 수집을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다.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 국회 입법조사처, 블로거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방통위가 발표한 해명자료¹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한 바가 없’ 으며, ‘본인확인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하다고 하고 있다. 이 해명자료에서 방통위는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서

¹ [해명자료] 전자신문 보도(8.3)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비스제공자들은 신용평가정보사 등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인증을 받은 후, 본인 확인정보(본인인증 결과값)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 라고 밝혔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 이전에도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의 태도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를 전후하여 기업들은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라고 주장하며, 최시중 위원장에게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건의하기도 하였다.² 그럼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3호에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 i-PIN 홈페이지³를 보면, i-PIN과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을 비교하면서, i-PIN은 주민등록번호가 웹사이트에 저장 안되는 반면,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은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본인확인제가 주민등록번호 의무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최소한 방통위는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방치해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님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도록 계도한 바가 있는가? 나아가 2008년에 발표한 대책에서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하고, 일반적 포털 등은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법제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고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2 [오마이뉴스] 국내 포털만 잡는 실명제... "우리도 구글처럼!" (2010.4.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6205

3 <http://i-pin.kr/>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⁴⁵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법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어쨌든 이제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를 빌미로 주민등록번호를 남길 명분은 없게 되었다. 유출 사고 직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른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보관을 중단하고,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설명대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유출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개인정보를 훔치려고 하는가? 당연히 개인정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즉 인터넷 실명제는 그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긴다. 이미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⁶ 8월 8일 발표한 대책에서 방통위는 ‘중국발 해킹 발생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중국 정부기관 및 인터넷 유관단체와 공조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중국 정부와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는 하지 않았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거나 거래되어 왔다.⁷⁸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자체를 고유 행정목적으로 최소화하여 그 이용가치를 줄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4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5 2008년 발표한 대책에서 방통위는 ‘유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상 명의도용 방지’ 대책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외에 추가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사업자들이 도입토록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엉뚱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려는 사람이 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겠는가?

6 [연합뉴스] ‘중인터넷·한국실명신분증’ 검색에 링크 139만건 (2011.8.2)

7 [헤럴드경제] 중국 포털에 내 주민번호가 떠돈다 (2009.11.25) [한겨레]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 건당 1원 (2010.3.30)

8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노출 해외사이트 점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190건, 2009년 265건, 2010년 상반기 126건으로 해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 사이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 [국감] 주민번호 노출 가장 많은 해외사이트는 ‘중국’ (2010.10.8)

2. 아이핀(i-PIN)은 대안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문제가 될 때마다 방통위는 아이핀을 대안으로 내세워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아이핀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아이핀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불필요한 인증 요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인터넷 실명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 방식이 이름-주민등록번호 확인 방식이든, 아이핀 방식이든, 공인인증서 방식이든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 자체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며, 인증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인 인증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아이핀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도용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이핀을 개설할 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의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2차 확인 방법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6월, 무기명 선불카드, 대리인증제도, 대포폰 인증 등 아이핀 발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⁹ 이후 방통위는 선불카드나 대리인증제도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대포폰을 통한 아이핀 발급 등 명의 도용의 위험은 남아있다.

⁹ [연합뉴스] 아이핀 불법발급 유통 적발 (2010.6.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아이핀 : <http://i-pin.kisa.or.kr>

셋째, 100% 완벽한 보안이란 없다고 했을 때,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불필요한 인증은 6대 인증기관¹⁰에 의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지는데, 이들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파급력은 일반 업체들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들 인증기관은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내역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 인증기관은 유료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나 나서서 이들 사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장사를 하게 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넷째, 아이핀은 이름-주민등록번호 확인 방식의 인증을 대체하기 힘들다. 아이핀을 도입한 지 4년이 넘었지만, 2011년 8월 현재 아이핀 사용자는 36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¹¹ 즉, 인터넷 이용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왜 아이핀을 사용하지 않을까? 불편하기 때문이다. 노인과 같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름-주민등록번호 확인 방식의 인증이 유출 및 명의 도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된 인증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그나마 간편하기 때문이다. 자신 명의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부부같은 경우 한 사람 명의로 핸드폰 가입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들은 자식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은 그나마 아이핀에 가입할 수도 없다. 물론 인증기관을 방문해서 대면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누가 그러한 부담을 지겠는가?

¹⁰ 2011년 8월 현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공공아이핀센터 등 6개 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다.

¹¹ 『이데일리』 인터넷 여전히 주민번호..아이핀 360만 불과 (2011.8.1)

3.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

1)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

비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명의도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악플을 규제하겠다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명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반면,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고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2009년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거부 이후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터넷 기업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지난 2010년 6월 10일 발표한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에서 본인확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규제 개선 추진반’을 운영하고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350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허용되는 한,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명의 도용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해왔다. 지난 2006년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이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시 행정자치부의 대응은 고작 ‘보안 강화’와 ‘명의 도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도였다. 이것이 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은 그 이후 벌어진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첫째, 번호 자체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다는 점, 둘째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 영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행정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만큼, 기업들은 인터넷 실명제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기존에 수집된 것도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도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 정책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8.8 대책) 큰 틀에서는 환영할만한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가 없어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특히, 예외적인 허용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외에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록 보유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 6조¹² 1항은 거래에 관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항에서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6조에서는 거래기록에 따라 6개월, 3년, 5년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유출 이후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은 앞으로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수집된 정보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싸이월드에서 스킨이나 배경음악, 도토리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위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동 법률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기관에서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적 규정인지, 혹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전자결제 업체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판매 업체에서는 결제 기록만 보관하여 나중에 전자결제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해야 하는지 의

12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이다. 만일 동 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화를 의미한다면, 법 개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통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는 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은 평생 도용에 의한 피해를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탈북자 등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¹³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8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¹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일인 확인을 위한 사회적 혼란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 왔음 - 또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직장 등 각종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여 국민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일정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혼란’ 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수집 금지와 변경 요청이 이미 2008년 옥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당시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이용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일련 번호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13 [연합뉴스]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 (2008.7.6)

14 (설명) <해킹당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구> 경향 등 보도 (행정안전부 언론기사 해명자료 게시판, 2011.8.9)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지금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던 기업들도 이제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2009년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¹⁵에 따르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필수정보로 수집해왔으며, 심지어 직업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서비스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들의 수집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¹⁵ <http://act.jinbo.net/drupal/node/3941>

거둬진 개인정보 유출 - 그 원인과 대책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올해 들어 여러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나왔다. 현대 캐피탈, 농협 등의 서버가 해킹공격을 당하여 막대한 분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싸이월드와 네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도 침입공격을 받아 3500만에 달하는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동안 국내 이용자들의 컴퓨터(클라이언트 PC)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감염된 컴퓨터(이른바, “좀비PC”)를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DDoS 공격, 스팸메일 발송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지만, 오히려 서버의 허술함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의 허술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낸다. 천만이 넘는 고객을 상대로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서버의 루트암호(관리자 계정 암호)를 여태껏 비상식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서버접근 절차에 대한 보안통제가 전혀 없었다(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눈가림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등, 내놓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서버보안 부실 상황이 드러났다. 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보안 프로그램’ 에 대한 잘못된 집착

그동안 국내 보안업계의 모든 관심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취약점에 대처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동원된 방법은 이른바 “보안 프로그램” 을 부가 프로그램 형태로 유저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는 발상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유저의 컴퓨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발상은, 초보인력들이 실험실 상황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

이다.

실제로는 그런 부가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무수한 위험 요인들이 새로이 등장한다. 서버들마다 유저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운로드 서버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뿌러지는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보안 프로그램” 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설치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언제나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가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설치나 실행을 어렵게 해둔 여러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국내의 컴퓨팅환경은 양심적 보안전문가라면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보안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컴퓨팅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종합적 방안에 대한 아무 이해도 비전도 없이, 그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식의 무모한 단편적 발상이 지배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이 마구 뒤섞여 나도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유저들은 보안 경고창을 그저 “OK를 누르면 없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보안업계는 이런 사태를 개선하려고보다는 점점 악화되는 보안 환경을 보안 프로그램 영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2. 그릇되고 경직된 규제 체제

더 큰 문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의존하는 이런 열악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금융기관들이 채택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저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비밀번호에 더하여 PKI기반의 개인인증서를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만을 놓고 보면야, 이론적으로는(즉 인증서의 발급/재발급, 관리 절차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모든 유저들이 자신의 인증서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어려운 전제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 한다면) 보안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공인인증서의 저장방식이 특이하여 그것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부가 프로그램을 유저의 컴퓨터에 일일이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무한정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서 개인키 파일이 쉽게 유출될 수 있어 그 개인키를 실제로 해당 유저만이 이용하는지는 거의 전적으로 인증서 개인키 암호가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식의 공인인증서는 이론적 보안 효능보다는 부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설치가 실제로 초래하는 부정적 보안위험이 더 크고, 결국에는 저급한 고정 암호(유저가 선택한 인증서 개인키 암호는 유저의 다른 여러 계정 암호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에 명운을 거는 보안체제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런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요하고, 거기에 더하여 온갖 부가적 “보안 프로그램” 을 유저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는 것이 마치

유일하고 불가피한 보안기술 해법인양 믿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런 사태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세계 각국의 보안기술 진전 방향이나 전자금융 감독 기법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기는커녕, 외국은 전자금융거래 발달 수준이 미개할 것이라거나 외국의 금융거래는 보안이 허술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오해와 자기 합리화에 골몰하고 있다. 현대 캐피탈이나 농협 사태처럼 엄청난 보안 사고가 터져나온 뒤에도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그리 변한 것 같지는 않다.

3. 클라이언트 보안 위주의 경직적 규제 체제의 함정

보안 규제의 경직적 운영은 참신하고 다양한 보안 기술의 시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가로막아왔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천편일률적인 보안 솔루션을 지난 10여 년간 사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업체 간의 활발한 기술 경쟁이나 그를 통한 보안 기술 혁신, 외국의 다양한 보안 기술 트렌드의 시내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유저 PC에 각종 부가 프로그램을 강제 설치하는 것으로만 일관하는 경직된 보안 규제 체제는 유저들이 웹사이트가 설치하라는 부가 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반복 학습” 시킴으로써 유저들의 컴퓨터/인터넷 이용 행태 자체를 위협하게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서버 보안의 허약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첫째, 금융기관들은 강제 규정이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보안에 관한 사항을 구비하는 데에만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솔루션 제공/판매자의 입장에서든 규정으로 강제되지 않는 서버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금융기관(발주자 또는 솔루션 구입자)에게 설명하기 곤란하게 된다. 규정이 강제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대비될 경우, 규정으로 강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용 투입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제 규정이 아예 없었더라면 ‘보안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 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자원 투입이 결정되었을 터이지만, 강제 규정은 이러한 합리적 투자 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비록 강제 규정을 입안하는 자는 ‘최소한’ 의 보안 요건만을 규정화하려는 선량, 순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강제 규정에 정해진 것 이상의 보안 조치는 업계가 (강제 규정이 아예 없을 때보다 오히려) 더 소홀히 하게 된다. 강제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들은 사실상 ‘보안 조치의 상한

선' 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공인인증서사용마크>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둘째, 서버가 허술하여 계정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조치를 모두 다 취했으므로 잘못이 없다” 는 주장을 쉽게 내세울 수 있게 된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개인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다” 는 점을 입증해도 개인고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잘못이 아니다” 는 주장은 소용이 없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강제 규정은 금융기관에게 “우리는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했으니 우리 잘못은 아니다” 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손해 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이익이 되어야 투자를 한다. 보안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PC에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따위의 특정 조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업체는 이것만 하고 나면 사고가 터져도 핑계거리가 생기므로 안 물어줘도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 물어줘도 될 가능성을 강제 규정이 제공해 주는데 보안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은행 서버가 허술하여 계정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터진 경우, 강제 규정이 아예 없었다면 해당은행이 ‘합리적 보안 조치’ 를 빠짐없이 모두 다 취했는지가 문제로 되고, 서버의 보안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제규정은 보안을 강화하기는커녕, 금융기관들이 (규정으로 강제된 클라이언트 보안 조치만을 취하고, 그 이상의) 보안을 위하여 투자할 인센티브를 오히려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자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과 같은 식의 지엽말단적이고 경직적인 강제 규정을 폐기하고, 서버가 됐건 클라이언트 PC에 관한 것이건 “합리적 수준” 의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반적 권고 규정만을 두고, 과연 무엇이 “합리적” 인지는 사안별로 업계 전문가의 구체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4. 개선 방안

물론 금융기관만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 문제는 금융기관조차도 서버 보안에 대한 세련되고 선진적인 조치를 취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국내 보안 업계의 역량 자체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안 감사 서비스 활성화

클라이언트 보안에 대한 강제 규정이 초래하는 문제에서 보았듯이, 서버 보안 역시 구체적 항목 별로 특정 보안 기술의 적용을 경직적으로 강제하려는 발상은 피해야 한다. 서버의 보안 절차에 대하여 (민간 업체가 수행하는) 국제기준의 보안 감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서버 보안 수준에 대한 점검이 전문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서버가 이러한 보안 감사를 받도록 강제 규정을 도입하려 하기 보다는 서버가 자신의 보안 조치 및 보안 절차에 대하여 어떤 점검과 감사를 제3자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보안 업계는 그동안 오로지 클라이언트 보안 프로그램 위주의 영업으로 일관해 온 나머지, 서버보안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보안 강제 규정이 보안 업계의 경쟁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수집 정보의 최소화

흔히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유저들로부터 일단 받아두려는 경향도 있다. 나중에 자신들이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이긴 하나 이런 관행은 제지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직접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직적 규정은 업계의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 보장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언제나 열람,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원 가입 시에 확보한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 후에도 보유하는 관행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

유출 사실 공지 의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공지하도록 의무를 지을 필요가 있다.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벌칙 규정을 둘 경우,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사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사고 사실을 공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평소에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어지간해선 이제 충격받지 않는다. 하나SK 카드에서 회원 정보가 5만 천 건이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이 딱 이렇다.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를 거의 포괄하는 3천5백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데에도 없었던 일처럼 금세 나라 안이 조용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현대캐피탈 42만 건, 삼성카드 80만 건, 그리고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라는 점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보안기술 강화’에 맞추어지고 있다. 최신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그러하고,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조언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걱정하고 빼돌리는 내부인의 유출에 답이 되지 못한다. 내부인 유출은 외부인에 의한 것보다 손쉬우면서 조직적으로 은폐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삼성카드는 80만건을 20만 건으로, 하나SK는 5만 천 건을 200건으로 유출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역시 지난해 12월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은폐해 왔다. 이런 문제는 끝도 없을 것이다. 내부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빼돌리자고 마음먹게 하는 동인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동인은 돈이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돈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시중

에 유통하는 암시장은 어느덧 거대한 규모가 되어 버렸다. 지난 9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만도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중생산과 대중마케팅의 시대가 가고 다품종 소량생산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산이 바로 고객의 취향 등 개인정보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뉴머러티’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가지각색의 개인정보를 SNS 등 인터넷에서 긁어오고 분석하기에 바쁘다고 한다. 물론 수요의 한 축에는 정치적인 반대자 제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전통적 국가 감시도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가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등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 인터넷의 ‘인증 강박’에 있다. 한국 인터넷은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인터넷 포털에 댓글 하나 남기려 해도,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해도,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각종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거 시기에만, 주요 포털에만 적용되었던 실명제는 이제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때도,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기 주민번호를 사용하기 싫거나 주민번호가 없는 세계 시민이 한국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중대한 행정 서비스에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인정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글 좀 쓰자고, 게임 좀 하자고 주민번호를 막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인가.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정부는 무얼 하는가? 정부는 ‘SK컴즈에서 유출된 주민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으니 장기간 안전할 것이다’고 답변한 후 대책이 없다. 아니지, 있긴 하다. 비밀번호 바꾸란다. 그리고 아이핀을 쓰란다.

헛발짓는 아이핀 대책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인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가 당정 협의를 위해 작성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자료에는 무려 4개 분야 13가지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등) 전면 보급, 취약분야 실태점검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 관련 법령 단계적 정비, ‘개인정보 삭제’ 범국민 운동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방지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넷째, 집단분쟁조정제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시행 등 개인정보 침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대책들 대부분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를 점검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어차피 도입될 예정인 제도를 재탕하여 거론한 것들이다. 그래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보급하겠다고거나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대목은 확실히 눈에 띈다. 지금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하면 기존의 법제도를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정부가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엉뚱한 제도를 밀어붙이려 하는 데 있다. 즉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정말 끊겠다는 생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핀이 무엇인가? 어차피 주민번호를 토대로 한 식별번호가 아니던가? 게다가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년 4,400원짜리 공인인증서를 구입하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댓글 달려고 그 짓을 해야 한다니 국민을 참 할 일 없는 사람 취급한다. 번거로와도 안전하다면야 시비걸 일이 많지 않겠다. 그러나 기왕 귀찮을 것, 인터넷에서 입수한 아무나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를 발급받은 후 그 이름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감쪽같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으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대처하는 이 나라 정부의 대책이다. 무엇보다, 아이핀을 의무화한다고 집나간 주민번호가 돌아오는지? 참 깨알 같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이핀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점 짚은 간파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식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이핀 활용에 대한 실효성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승수 의원의 질의에 회신하면서, 아이핀은 효과성·신뢰성·활용도의 측면에서 모두 낙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핀 발급 기반도 주민번호이므로 근본적으로 아이핀이 주민번호의 위험성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6월 발생하였던 13,000여 건의 부정발급 사건을 꼬집었다. 물론, 이때 집나간 아이핀은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는 문제의 원인을 ‘인터넷 실명제’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는 한 주민번호의 저장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요구되는 것이었고, 아이핀 역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존속하는 변형 주민번호 제도라는 것이다. 결국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는 인터넷 실명제에 기반한 주민번호 및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을 감축시켜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정부의 또다른 대책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아이핀이라면, 오프라인에선 증 발행번호를 쓰자는 것이다. 행안부 자료에는 증 발행번호 도입이 주민번호 수집 및 처리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제안하는 정책으로 거론되어 있다. 흥, 거짓말이다. ‘증 발행번호’는 전자주민증으로 주민증을 경신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2010년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 발의까지 마친 상태이다. 즉, 정부는 증 발행번호 도입이라는 포장으로 전자주민증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덜컥 이 제안들을 받았다.

증 발행번호, 좋다. 진즉에 주민번호 같은 인권침해적인 사람 번호가 아니라 증 번호였어야 했다. 그런데 증 발행번호를 적용하기 위해 새 주민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전자화된 방식의 주민증일 필요성은 없지 않다. 기존 유형의 주민증을 경신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뿐이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주민번호와 지문 등을 전자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현행 주민증의 경신주기마다 발행번호를 새로 수록해 가면 충분히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큰 의구심은 증 발행번호에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증 발행번호가 주민번호와 병행하여 사용되면 주민번호 대체 내지 사용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를 칩에 넣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는 아니다.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할 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전혀 아니다. 전자화된 정보가 장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본인 동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공공과 민간기관의 관독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록사항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록사항에서 제외하지 않고 증발번호를 한층 더 없겠다는 계획 하에서라면 누가 주민번호 사용을 마다하겠는가.

실명제를 폐지하라

나라가 거덜난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주무하는 행정안전부는 판청만 피우고 있다. 아니, 개인정보 유출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채권추심업체를 비롯한 52개 민간업체에 건당 30원씩 받고 팔았다. 3년간 5천 9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7억 8,054만 3,230원의 수익을 올렸다. 4대강 사업으로 절단난 나라 살림을 개인정보 판매로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는 것이었을까? 이들이 민간업체 넘긴 주민번호가 지금 인터넷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

말하겠다. 정답은 다른 데 있다. 먼저, 유출된 주민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이토록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 사회에서, 유출된 번호를 계속 사용하라는 것은 신원 절도를 조장하는 짓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무나 주민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구할 일이 없어진다. 짝퉁 주민번호 아이핀도 마찬가지이다. 신원 확인 강박 사회에서 인증 수단을 아이핀으로 바꾼다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질리 만무하다. 불필요한 인증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신원 인증을 해야 하는가? 휴대폰 요금 잘 내면 될 것 아닌가? 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위해 전국민이 사전에 신원 인증을 해야 하는가? 인터넷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후에 추적하시라.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제야말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주민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손보아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을 보여라. 전자주민증이니 아이핀이니 헛소리 그만하고.

Section 010. 이슈

주민번호 변경 소송인단 모집합니다! / 진보넷
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 장여경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조동원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조동원
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 장여경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합니다! ¹⁶

진보네트워크센터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7월 26일 발생)!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유출된” 3,500만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기관에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원을 넘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della콜뱅이jinbo.net

둘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¹⁶ 이 글은 Daum 아고라의 이슈청원으로 올린 글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274>

[정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트 사태 이후 발표된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대책보기¹⁷

* 행정안전부 대책보기¹⁸

요약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비밀번호 바꿔라” “아이핀을 사용해라” “전자주민증 도입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변경은 불가하다” 고 밝혔습니다.

= 관리감독 강화?

2008년 옥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는 말뿐입니다. 2008년에 발표했던 대책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그에 대해 책임은 인정했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발표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들도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를 보관하란 뜻은 아니었다” 고 이제와서 발뺌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정부가 아이핀을 홍보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를 보관한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그러한 정부의 해석에 따라서

17 [http://www.kcc.go.kr/user.do?](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c%a0%ec%b6%9c&boardSeq=31667)

[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c%a0%ec%b6%9c&boardSeq=31667](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c%a0%ec%b6%9c&boardSeq=31667)

18 [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20661&userBtBean.ctxCd=1013&userBtBean.orderNo=2)

[userBtBean.bbsSeq=1020661&userBtBean.ctxCd=1013&userBtBean.orderNo=2](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20661&userBtBean.ctxCd=1013&userBtBean.orderNo=2)

보관해온 것입니다. 정부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합니다.

= 비밀번호 바꿔라?

물론 3,500만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통제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무엇보다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보관해온 것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주민번호 보관을 유도하고 정당화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 주민번호를 보관하도록 해석되어 온 법률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관과 그에 따른 유출의 책임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아이핀 사용해라?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1년 후부터 일일평균 1만명 이상 홈페이지에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핀은 ‘유료 실명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연 4,400원을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서울 모처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구요.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왜 이런 비용을 써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데 5개 아이핀발급 신용정보회사들에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한답시고 신용정보회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분량만 불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들이 신규 편입되고 있습니다. 아이핀 업체들은 공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이렇게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돈받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니 뭐니해서 월 얼마씩 받고 말이지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한답시고 개인정보 상업화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핀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구요,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면 아이핀 역시 부정발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핀 또한 주민번호의 대체가 아니라 ‘병행’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기존 법률이 주민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입니까?

= 전자주민증 도입?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서 ‘증 발행번호’ 역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 발행번호’ 를 도입하면서 꼭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행 주민증에 증 발행번호만 추가하면 됩니다. 게다가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를 ‘대체’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병행’ 사용한다면 증 발행번호가 어떻게 대책이겠습니까?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에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칩’ 에 내장되어 ‘전자적’ 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칩과 인식기, 네트워크가 절대 위변조, 복제 및 유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하다고 정부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 주민번호 변경 불가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류, 성별전환,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해 왔습니다. 유출된 사람에게는 변경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하더라도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개명을 해주는데 불편하더라도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명자에게 적용되는 공공과 민간의 절차들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불편이 더 야기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인터넷을 떠돌아 다니는 상황 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보아도 정부는 귀를 꼭 틀어막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할 때도, 옥션 사태 때도, 아이핀 도입할 때도, 전자주민증 밀어붙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으시다!

[소송인단 참여 방법]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della@jinbo.net

행정안전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실 분은 아래 청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민원을 넣고 della@jinbo.net 으로 연락을 주시면 주민번호 변경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안)]

* 제출할 곳 : 행정안전부 민원사이트 <http://bit.ly/n7f6zR>

청구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11년 8월 일

청구의 내용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

청구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회원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최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이 원인임.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2011년 9월 일

청구인 이름 (인)

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당일 채증된 사진에서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없으니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면밀한 신체 검증을 하자고 한다. 그 면밀한 신체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3D 영상채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여자를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검증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충격적인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적 검증은 그 자체로 모멸적인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경찰의 식별 편의를 위해 노동자들이 줄줄이 출두하여 살살이 영상 촬영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론 이 정부 들어 우리가 접한 황당한 강제수사는 이뿐 만이 아니었다. 전교조와 YTN 노동조합에 대한 장기간의 이메일 압수수색,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PC방 압수수색,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DNA 채취,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인터넷 패킷감청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수사기법이 현란하게 동원되어 왔다. 이런 무리한 수사방식은 결국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이 정부의 반인권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이 무제한으로 디지털 수사기법을 동원하도록 놓아둔다면 어떤 인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경찰 편의를 위한 신체 검증이 허용된다면 경찰국가는 이미 도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신체 검증은 결코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들의 사진은 앞으로도 유성 기업과 관련한 행동을 감시하는 데 계속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집회시위 참여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하며 연대할 권리를 명백하게 억압하는 것이다.

또한 유성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또 어떤 시민이 집회 참여자를 식별한다는 명분으로 신체검증을 받을 지 누가 알겠는가? 집회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분 뿐이겠는가? 경찰이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할 불법 행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CCTV가 모든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상시적으로 채증하고 있는 시대이다. 의심스럽기만 하면 누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불려나가 검증사진을 찍어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다. 유성 기업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 시민의 인권 문제이고 경찰권 남용에 관련한 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신체 검증' 을 반드시 저지해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에 2011년 8월 25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유출 -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유출(leak)은 안에서 흘러야 할 것이 밖으로 샘,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의 드러남, 표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의 표현, 표출이다. 그것이 액체성을 가진 물질이든 손에 잡히지 않는 정보이든 유출은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고, 민주주의 사회에도 비밀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숨겨야 할 의도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유출은 더 나아가 폭로가 된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 체제 - 정보가 자본의 운동과 권력의 작동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 구조에서 정보 유출은 별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인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디가 찢고 있었는지를 느닷없이 싹뚝 잘라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

석유 유출이나 방사능 유출이 엄청난 재난과 파괴를 동반하며 우리가 산업문명을 영위하는 체계가 얼마나 지구 생태계에 반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산업 기밀 유출, 음원 유출, 영화 파일 유출, 화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 역시 정보의 상품화, 비밀주의의 보호 또 그에 대한 위반의 감시체계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찢어가는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서 인권과 양심조차 움짱 달짝 못하게 갖혀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막혀 표출되지 못할 때 결국 그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이 있다. 이런 유출은 내부고발, 폭로, 정보공개, 정보자유라고도 한다.



위키유출(wikileaks)은 지난 몇 개월간, 특히 7말 8초의 무더운 아열대를 지나는 날들에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국제 뉴스였다. 지난 2010년 4월 5일에 공개된 ‘부수적 살인’ (collateral murder)은 2007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들이 포함된 민간인 10여 명과 서방 기자 2명을 미군이 아파치 헬기에서 기총소사로 무차별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다.¹⁹ 그에 이어 7월 25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한국군도 포함된) 연합군이 저지른 무려 144건의 민간인 학살 사례가 담긴 20만 페이지 분량, 9만 2201 건의 비밀 문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Afghanistan War Logs)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²⁰

언론에서는 해커였고 기자였던 호주 출신의 줄리안 어센지(Julian Assange)가 마치 위키유출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유출 문서의 편집자이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부정 부패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편집, 보도자료 작성, 주류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는 일을 맡는 정보 활동, 내부고발자와 위키유출의 정보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내부고발과 문서 공개를 익명성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상태로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천 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있다.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반체제 인사, 인권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해킹활동가 등이 오랫동안의 견을 나누며 토론을 벌이다가 2006년 12월에 위키유출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이 후 위키유출은 전 세계 곳곳의 부정 부패 혹은 기밀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을 도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문건 2개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을 증거하는 사진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되면서 위키유출에 올려져 공개되기도 했다.

이 참에 위키유출은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의 내부에서 썩고 있는 문제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내부고발 사이트이자 정보공개 운동 네트워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면, 마치 멕시코만을 시꺼멓게 뒤덮으며 유출된 석유처럼(만약 한국에서였다면?) 지구 전체를 뒤덮은 검은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 유출되며 보다 맑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액체적 물질성(이를테면 내부고발자의 존재)과 정보적 비물질성(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의 결합이 갖는 위력이 암시된다.

19 collateralmurder.com

20 wikileaks.org/wiki/Afghan_War_Diary,_2004-2010

위키 - 위키경제에서 위키정치로!

내부고발 성격의 정보 유출에 위키 방식이 결합된 것이 위키유출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키백과(wikipedia.org)나 위키유출(wikileaks.org)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위키(mediawiki)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곧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위키위키’는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웹기술에 적용된 이 말은 편집자와 같은 어떤 권위적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신속성과 직접성을 가리킨다 하겠다.

2001년에 탄생한 위키백과는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문화 혹은 네트워크사회의 핵심 열쇠말의 하나였다. 위키백과를 통한 또래간(p2p) 협력적 지식 생산이 보여준 폭발적인 정보 생산력과 공유지 희극의 생산관계는 그 어디보다도 네트워크경제, 지식기반경제 주창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아예 위키경제(wikinomics)로 불릴 정도였다. 그에 필적할 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위키백과에서 검증된 위키 방식이 이제 정보의 정치 영역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위키유출이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키유출은 위키백과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소개 내용에 따르면, 위키백과에 글 올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유출문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키유출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위키유출에 제출된 문서는 그러나 곧바로 공개될 수 없다. 한편으로 내부고발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악의적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신뢰성을 먼저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안의 경우, 문서 내용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한 정보들이 있는지 검토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적들에도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조리한 현장을 목격하고 마침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촬영을 한 후 그 사진을 포함한 증거 문서를 위키유출에 올렸다고 할 때, 만약 그 사진 파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면 그 사진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기 고유번호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사진들의 고유번호와 비교하여 바로 그 사진기로 찍혀진 다른 사진들이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그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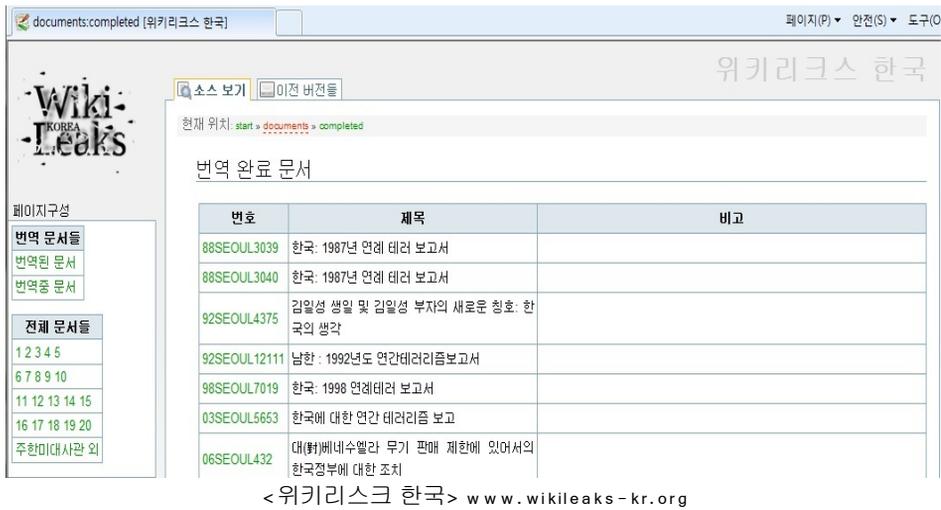
또한, 허위정보 유출과 정보남용의 가능성도 크다. 일반 언론도 수없이 많은 오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해서 언론피해 구제 제도가 있기 마련인데, 위키유출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그렇듯이(리누스 법칙), 위키

백과가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올리고 고칠 수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높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마찬가지로 위키유출에 올려진 유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그 사안과 관련한 여러 단체들과 공동체가 원천 문서를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구나 의견 제시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출된 문서의 정치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전문가들만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서와 관련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키유출에서 위키 방식이 갖는 의미는 기존 언론과 다르게, 아주 쉽게 내부고발을 위한 유출 문서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익명성 보장의 프라이버시 기술의 사용, 그 문서의 신뢰성을 공동체의 힘, 이른바 집단지성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안보(혹은 국가보안)라는 논리 하에, 기밀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혹은 자체 검열에 의해 주류 언론 미디어는 어떤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위키유출은 직접성, 익명성, 집단지성이라는 인터넷의 논리에 따라 그런 제약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권력의 작동과 자본의 운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보의 흐름은 그 자체로 전쟁을 방불케하고, 이 정보 전쟁의 한편에서 위키유출은 권력 감시를 위한 초국적(무국적) 정보 네트워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위키유출 - 역감시의 기술

내부고발자가 쉽게 추적되어 보복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위키유출에 문서를 올리는 순간부터 익명의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가동된다. 그 중 하나가 ‘양파 라우터’ (onion router) 혹은 ‘토르’ (tor, torproject.org)다. 인터넷 자체가 애초에 핵공격을 받더라도 두절되지 않는 군사적 목적의 통신망으로 설계되고 개발된 것처럼, ‘토르’는 적군에 노출되지 않는 통신을 위해 미해군이 개발하다 중단한 것을 해커들이 재활용한 것으로, 한 때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의 후원 하에 개발되기도 했다. 중국이나 이란에서는 위키유출을 포함해 정치적 이유로 차단되는 웹사이트들이 많은데, ‘토르’는 이런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며 익명으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위키유출에 올려진 유출 문서는 또한 정교하고 암호화되어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의 보장을 기한다. 이를 위해 ‘아주 잘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Pretty Good Privacy)라는 뜻의 ‘피쥬피’ (PGP)가 응용되어 사용된다. ‘피쥬피’의 개발자인 필 지머만(Philip R. Zimmermann, philzimmermann.com)은 애초 인권을 위한 도구로 이를 디자인해서 1991년에 전자우편 암호화 소프트웨어 꾸러미 형태로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오늘날 암호화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상거래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공개될 당시만 해도 암호화는 첩보기관 정도에서만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무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기술이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 개발되고 공개된 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머만은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았다. 그런 탄압에도 ‘피쥬피’ (PGP)는 인권운동의 현장에 퍼져나갔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암호의 국가독점에 반대하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피쥬피’ 사용 운동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위키유출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중이다.

위키유출의 온갖 문서들이 저장되고 있는 서버의 경우, 위키유출 활동을 막기 위한 불의의 접속 차단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정보공개법이 있는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에 서버를 두고 있다. 그에 더해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 각 곳에 분산된 여벌 서버들이 배치되어 있고, 올라온 문서는 암호화되어 자동으로 이들 서버에 복제된다. 그 외에도 위키유출에 자원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해킹활동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위키유출의 소개 내용에 보면,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안전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기술’ 혹은 ‘문서유출기술’ 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르게는 역감시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부수적 살인’ 비디오나 ‘아프간 전쟁 일지’ 의 공개 사건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체제에 맞선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중요성, 진정한 정보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명성과 익명성의 결합이 갖는 잠재적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 역감시 기술을 위한 해킹행동주의야말로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회운동인 셈이다.

수많은 위키유출들이 필요하다!

물론, 위키유출의 정보 정치 혹은 위키정치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위키유출을 통한 폭로로 충분한가? 충격적 사실의 폭로 방식은 또 다른 미디어 스펙타클 효과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도 다른 미디어 스펙타클 속에 묻혀, 혹은 감당이 되지 않아, 어느새 잊혀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충격적인 학살 증거나 내부 문서가 없어서 파병이 중단되고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가? 오히려 사회정의와 인권, 반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은 그런 충격적인 진실의 일회적 폭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기 조직화와 일상의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구어나가는 실천만이 유력한 방식이 아닌가? 또, 사실상 위키경제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된 수많은 이용자들의 대량의 참여, 공유, 협력을 이용해 집단지성이나 군중외주생산(crowd sourcing)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기획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든 것처럼, 위키유출과 같은 위키정치는 기성 정치권이나 지배적 정보 구조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역감시의 기술 정치로 계속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가? 1세계 나라들에 민주주의가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며, 위키유출은 주류가 되고, 전쟁은 계속되고, 그러는 사이 내부고발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더욱 정교하게 되는 악순환의 시작은 아닌가?

위키유출에 결합하고 있는 한 해킹활동가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해킹하자” 는 말처럼, 지구적으로 생각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암울하기까지 한) 쟁점들을 지역적으로 변화시켜나가며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그 한계와 제약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수많은 위키유출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실험과 시도로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통한 정보운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투명성과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다 더 강력한 기술 개발 운동도 필요하다. 역감시의 기술의 경우 이번 위키유출의 편집자는 상당한 개인적 위험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 위키유출에서 더 나아가 역감시 모델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보다 더 분산되고 또래 간(p2p)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토론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와 관련해 볼 때, 아이슬란드의 최근 입법 사례는 놀랍다(immi.is). 2010년 6월 17일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국제 피난처’ (가장 강력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정보자유법을 50명의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수상까지 지지를 보내도록 만들었다(이렇게 된 과정에 위키유출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정보자유와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변화의 기획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을 제정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김동춘 교수의 제안대로 유명무실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새로 개정하고 기밀과 의문에 붙여진 현대사의 진실을 중단없이 밝혀내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고발’ 사건을 통해 경험한 내부고발의 위력이 현대사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천안함을 둘러싼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집단지성이 참여하여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쟁 사업이 파산하도록 하는 뭔가 평화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참고한 것

- 김동춘, 정보공개운동을 제창함, 따뜻한 정의, 2010.8.6
- 위키유출 소개(한글): wikileaks.org/wiki/WikiLeaks:About/ko
- Jacob Appelbaum, Keynote Address - Wikileaks(기조연설: 위키유출), The Next Hope, 2010.7.17
- Jay Rosen, The Afghanistan War Logs Released by Wikileaks, the World's First Stateless News Organization(세계 최초의 무국적 뉴스조직, 위키유출이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PressThink, 2010.7.26
- Paul Marks, How Wikileaks became a whistleblowers' haven(어떻게 위키유출은 내부고발자의 피난처가 되었나), New Scientist, 2010.7.27

* 이 글은 인권오름 제216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 주의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었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그런데 일부 사이버 난민들이 찾아든 곳은 경제적인 검열과 감시 차원에서 단연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글닷컴이었으니, 그에 이어 당신수상기닷컴(혹은 유튜브, youtube.com), 재잘거리닷컴(혹은 트위터, twitter.com), 얼굴책닷컴(혹은 졸업앨범닷컴, 페이스북, facebook.com) 따위였으니, 사이버망명 생활은 오늘도 안녕한가?

무료 서비스의 사업모델은 감시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그 사업모델이 감시이기 때문이다(Saxon).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을 보면 기본 기능은 무료, 더 좋은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차별화(Freemium), 혹은 이용자 행동분석을 통한 감시(behavioral surveillance)를 유력한 사업모델로 한다.

구글닷컴의 경우 매출의 97%가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데, 각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맞춤형 광고’로 유명하다. 이를 위해 잠재적 소비자인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소득, 병력, 학력, 취미, 흥미, 선호, 관계, 활동, 행동, 일정, 위치 등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가 구글닷컴의 서버에 수집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가 입력한 연간 수천 억 건의 검색어와 검색 결과는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수집·분석되고, 쿼리 일계정으로 우리가 보내고 받는 메일 내용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들도 이를 위해 활용된다. 쿼리 일이 처음으로 기가바이트(GB) 단위의 메일용량을 무료로 주면서 어떤 메일도 삭제할 필요 없다고 선전한 이유를 알만하다.

이렇게 구글이 우리에게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글,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보고 듣거나 올리는 모든 활동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다. 또 하나는 그러는 사이 보이지 않게 내가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와 구글의 서버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인데, 이에는 웹페이지 방문(날짜, 시간, 내용), 이전 검색 기록, 아이피 주소, 우리의 웹브라우저를 식별할 수 있는 쿠키 아이디, 기타 메타데이터 등이다(Mitchell).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각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정된 광고’ (targeted advertising) 혹은 ‘맥락적 특정화’ (contextual targeting), 그에 더해 이용자가 이전에 본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광고를 때리는 ‘관심사에 따른 광고’ (interested-based advertising) 등과 같은 최신의 ‘행동분석 광고’ (behavioral advertising)가 실행된다. 이런 알 듯모를 듯한 전문 용어들은 바로 그런 전문성으로 미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보와 웹 이용 방식을 분석한 감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구글닷컴이 단연 감시 기반 개인정보 산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만큼 주로 들먹여지지만, 얼굴책닷컴이나 재잘거리닷컴 등 대부분의 사회적 미디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얼굴닷컴은 누가 누구랑 곧 사귀게 될 지 먼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무료 서비스로 돈벌이하는 방법(사업모델)은 광고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감시다. 예전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딴냐’는 반신반의였다면, 이제 공짜는 없을뿐더러 엄청 비싼 댓가를 치루는 일이 되었다. 이렇듯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맞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전술적 놀이를 몇 가지 정리해본다.



“빅 브라더 얼굴책닷컴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출처: 구글감시(google-watch.org)
그림모음(<http://www.scroogle.org/th/thumbs.html>)

사이버자살

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쓰는 웹사이트라면 그저 안 가고 안 쓰는 것으로, 회원제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그 곳의 검열과 감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즈음에 친정부적인 뉴스 페이지 편집과 비판적인 글의 무단 삭제가 빈번했던 네이버닷컴에 대해 집단적인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었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판과 집단 탈퇴가 이어지면서 네이버닷컴은 그 첫 화면에 수 천만 원의 광고 자릿세를 포기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특별 페이지를 배치했으니 이로써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존 미디어를 놓고 보면, 최근 상황에도 적합한 ‘한국방송(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나 ‘티브이 끄기운동’ 이 비슷한 맥락의 이전 사례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닷컴 탈퇴운동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끊기 혹은 안 쓰기 전술이라면, 애플사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탈옥’ 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는 그 운영체제(OS)를 애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 쓰는 일종의 해킹을 가리키는데, 감옥과 탈옥이란 비유가 사용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웹 2.0의 다양한 서비스들 -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 혹은 사회적 관계맺기 웹사이트(SNS)가 그 본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행동정보, 관계정보를 밀천삼아 돈벌이를 하다보니 그에 반발한 ‘웹2.0자살’ 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자살’ 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사이버자살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거의 반강제로 우리의 신상정보와 웹 기록이 공개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회원 탈퇴 행동을 가리킨다.

주로 얼굴책닷컴에 적용되는데 현실세계의 개념을 다소 섬뜩하게 가상세계에 적용한 과장된 비유임에 분명하지만, 사이버자살이 제기된 배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회원 탈퇴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 들과 관계맺은 친구들의 정보, 그들과 나눈 대화 모두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탈퇴해버리면 그 관계망에 심각한 단절의 구멍들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시 회원가입하실 경우를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들은 즉시 삭제 대신 계정의 “비활성화”로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정보, 우리가 올리거나 퍼나른 글, 댓글, 사진, 음악, 비디오, 우리가 친구 맺거나 가입하여 대화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 얼굴책닷컴 등의 해킹을 통해 즉시 삭제를 돕는 이른바 사이버자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얼굴책닷컴의 저열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자살 기계’ (suicidemachine.org)와 ‘할복 자결’ (seppukoo.com) 사이트가 유행한 바 있고, 무슨 국제 공동행동의 날처럼 2010년 5월 31일을 ‘얼굴책닷컴 끊는 날’ (QuitFacebookDay.com)로 정해 사이버 동반자살이 감행되기도 했다. 함께 자살하겠다고, 즉 회원 탈퇴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이였다.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무려 35%인 5억 4천만 명이 여전히 얼굴책닷컴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나의 친구들 대부분이 혹은 ‘민’ 주주의의 그 인민들이 아직 거기에 있으니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자살은 문제가 되는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탈퇴, 탈옥, 사이버자살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검열과 감시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아직 묻지도 않은 것이다.

사이버망명

2011.09.27 (화)

jinalsi 검색 iruum

개념칼럼 개념뉴스 토론광장 이름 즐겨봐 평해봐 한번해봐 개념가게 진알시

아이디 자동 로그인
패스워드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공지사항
진알시 총회 개최
진알시 총회 개최
이번 주 과주호는 분량이 적습
추석 귀향 선전전이 있습니다
초석특별과가 초석기자인 과

진알시
9월17일 한여름 갈
http://cafe.daum.net/jinalsicamp/Ln2s/60
다음카페/진실을 알리는 시민에 게재된 진알시후
기 링크입니다.

조중동 씨바리드 안보
세상을 비웃는 비본인론 오우사당

경향신문 (매금주: 경향신문)
외환은행 611-018108-842
농협중앙 1082-01-008125
한겨레신문(매금주:한겨레신문)
하나은행 555-910002-70004
농협 048-01-061873

“진실을 알리는 시민- 진알시” <http://iruum.net/sub9.php>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나 도구를 그만 쓰기로 하고 그 대체재를 찾아쓰는 갈아타기 놀이도 있다. 2008년 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널리 행해진 사이버망명은 정치적 발언과 결사 모의를 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검열과 감시에 공분하며 집단을 이뤄 특정한 미디어를 버리고 다른 미디어로 갈아탔던 일이었다. 기존 언론 미디어를 놓고 보자면, 2008년에 조직돼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iruum.net/jinalsi)가 하는, ‘조중동’ 안 보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 보자는 운동이 사이버망명과 유사한 접근이다.

당시 사이버망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경우, 한국의 상업적 대형 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쓰지 않고 외국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구글닷컴의 쥐메일이 선택되었다. 반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공간의 경우, 주로 다음 아고라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이 관건이었는데 기존의 것을 찾아쓰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 새로 만들자는 식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새로운 망명지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지만, 주로는 구글닷컴의 메일링리스트인 그룹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광고주 목록 공유를 위해) 구글 문서도구가 사용되었다.

아래에 나올 해킹행동주의는 검열과 감시로 망가져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면, 사이버망명은 일단 피하고 옮겨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옮긴 곳이 대안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구글닷컴이 주요 망명지로 오인된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었겠지만 국내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외국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탓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글닷컴은 앞서 보았듯이 대안이기는 커녕 더 세련된 감시 체계이다.

사이버교란

사이버자살과 사이버망명이 공히 가지는 한계는 기존의 구조가 갖는 검열과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다른 것을 찾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존 미디어의 검열과 감시를 바꿔내는 행동과는 크게 상관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자살폭탄’이다. 지난 2010년 4월에 또 다시 얼굴책닷컴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온라인 관계맺기 활동의 궤적을 더 많이 공개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났을 때, 한 메일링리스트(iDC)에서 제안된 것이 ‘얼굴책닷컴 자살(폭탄) 선언’ (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이었다.

사이버자살이 침묵이라면 '사이버자살폭탄'은 그와 반대로 일부러 무의미한 잡음을 내서 사이버세계의 지배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검열과 감시의 정보체계를 계속 쓰면서도 그 검열과 감시 방식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검열과 감시에 대항해 그 지배적 핵심을 휘방하거나 교란하는 전술적 놀이다. 이를 사이버휘방 혹은 사이버교란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문화운동의 한 전술로 자리잡아온 ‘문화휘방’ (culture jamming)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900년에 태어났다고 쓰기도 하는 것이다.

갈아타는 사이버자살에 비해 타고넘는 사이버교란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유쾌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지배적 구조에 의존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검열과 감시의 지배 구조를 교란하며 대항하는 일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창조하는 일과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해킹행동주의

바로 그 대안의 창조를 위한 유력한 정보기술운동이 해킹 혹은 해킹행동주의다.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는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가 결합된 말이다. 사이버자살, 사이버망명, 사이버교란 등 거의 모든 사이버 전술 놀이가 직간접적으로 해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열과 감

시에 대항하는 해킹행동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프라이버시 지킴이 도구들이 수없이 많다. 단적으로 구글검색과 관련된 것만 두 개 꼽아본다. ‘구글감시’ (google-watch.org)에서 개발한 스크루글(scoogle)은 구글닷컴이 우리의 모든 검색 기록을 집적하여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구글의 검색엔진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러지 못하도록 검색 과정을 암호화(SSL)해서 우리의 검색 활동이 익명 상태로 보호되는 검색도구이다. 가끔 구글닷컴이 차단하여 하루 이를 못쓰게 되기도 하지만, 스크루글의 검색 페이지(ssl.scoogle.org) 혹은 보다 편하게 불여우(firefox, mozilla.or.kr/ko)라는 브라우저의 부가기능(Scroogle SSL search)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역시 불여우의 부가기능으로 쓸 수 있는 ‘나를 추적-마’ (track-me-not, trackmenot.org)이다. 그 원리는 사이버교란의 방식인데, 우리가 검색한 것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별 의미없는 수많은 검색어들을 구글 검색엔진에 제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검색어인지 헷갈리게 하여 구글닷컴의 감시와 데이터-프로파일링을 막는 것이다.

해킹행동주의는 문제가 되는 중앙집중적 정보 통제 구조,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형 포털 사이트, 우리의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의 기록이 어떻게 수집·분석·남용되는지 비밀에 붙여진 영리기업의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손수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 손수 만든다는 것은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만나고 후원하고 연대하는 일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지만, 2008년 촛불시위의 정세 속에서 대안적 포털사이트를 만들려는 기획들이 여럿 제안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얼굴책닷컴 논란이 있을 때 사이버자살이나 사이버교란 말고도 얼굴책닷컴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흩어진 사람들’ (Diaspora)이라는 사회적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제안되었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4명의 대학생들이 추진한 이 작업은 사회적 논란이 격화된 때를 잘 타며 인터넷 소액 기부 모금 방식을 통해 순식간에 2억이 넘는 돈을 모으며 화제가 되었다(joindiaspora.com). 하지만 이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대안적 사회적 미디어 사이트들이 수 십 가지나 된다(GNU Social/Project Comparison 참조).

어울려 놀기

감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이버세계의 망명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정치적 망명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투쟁의 장소다. 그러니 사이버망명은 하나의 대응 방식일 뿐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 말고도 다양한 저항 방식과 대안 창조의 전술적 놀이들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전술적 기술 - 놀이 - 문화가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

참고한 것

- 장여경, 2009.9.7,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미디어스
- Christian Fuchs, 2010.2.14, "Google Buzz: Economic Surveillance - Buzz Off! The Problem of Online Surveillance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ternet"[구글버즈: 경제적 감시 - 버즈 끄기! 온라인 감시의 문제와 대안 인터넷의 필요성], Information - Society - Technology & Media
- Mitchell, Robert L., 2009.5.11, “What Google knows about you: Google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mother does. Got a problem with that?”[구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구글, 문제 있나?], ComputerWorld.com
- Saxon, Elijah, 2009.11, "The Price of Free"[무료/자유의 가격], Social Text
- 분산적 창조성 연구소 메일링 리스트: [iDC] “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 [얼굴책닷컴 자살 폭탄 선언], 2010.5.28.
- 구글감시집단 웹사이트: <http://www.google-watch.org>

* 이 글은 인권오름 제212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9월 16일,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소식이 트위터를 휩쓸었다. 지난 3월 29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패킷 감청’ 헌법소원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 감청을 실시해온 정황이 한겨레, 참세상 등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지메일 감청 소식에 대한 충격감 토로와 더불어,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지메일 감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 프로토콜이 암호화된 지메일을 정말 감청하였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이 답변서를 통해 밝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09년 6월 국정원은 패킷 감청으로 지메일 내용을 지득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만 이 시점에 대상자의 지메일이 https 프로토콜로 암호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구글 지메일이 https를 기본 설정으로 채택한 것은 2010년 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0년 12월 국정원은 법원에 패킷 감청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면서 그 사유로 대상자의 지메일을 감청하려는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법원은 이 사유를 인정하고 패킷 감청을 허가하였다. 다만 이번 패킷 감청 결과 국정원이 지득한 지메일의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정원이 사이버 망명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위 답변서에서 “[감청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Gmail, Hotmail)이나 비밀 게시판 등을 사용하는 등 소위 ‘사이버 망명’ 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터넷회선 감청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망명이 늘어난 것은, 국내 이메일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대상자 특정이 손쉽고 사업자로부터 감청 협조를 얻어내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정보수사기관들이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패킷 감청은 역사상 가장 인권침해적인 통신 감청 수법이다.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포괄적 백지 영장’ 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누군가의 인터넷을 감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독서하고,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쇼핑할 뿐 아니라 은행거래도 한다. 게다가 패킷 감청은 다른 감청과 달리 피의자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회선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 하에서, 현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 재판에서 피의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서 제출된 바가 거의 없다. 결국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통계상으로 국정원은 대한민국 전체 감청의 97%를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상 많은 실태가 비밀에 싸여 있다. 우리는 아직도 패킷 감청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감청 기관의 감청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국회도, 법원도, 이 나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비밀 권력이 또 있겠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하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이토록 마구 침해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1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뉴타운컬쳐파티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



뉴타운컬쳐파티 티저영상 中

독립영화는 나랏돈 아니면 가족펀드/친구펀드 외에는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술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요? 수용자를 단지 소비자, 혹은 불법복제자로 취급하는 저작권법, 그런데 저작권법은 독립영화 창작자에게 도움은 되는 걸까요? 여기 독립영화의 창작, 유통, 향유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영화 <뉴타운컬쳐파티>는 홍대앞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두리반’ 과 이들을 돕는, 그러나 홍대에서 밀려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이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있는 인디밴드들을 중심으로, 예술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예술가로 살고 싶은 예술가들의 고투를 겪은 인디 밴드들의 골통을 뒤흔드는 음악 속에 버무린 본격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회적 기금을 통해 제작비를 조달하고, 그 수익을 독립영화제작지원금으로 출연하여, 영화 한 편의 성공이 아니라 독립영화의 선순환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모색합니다. 또한, 작품의 정식 공개 1년 후,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영화인과 예술인, 관객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배급하는 영화 <뉴타운컬처파티>! 11월 공식 개봉 예정인 이 영화의 제작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영화 창작의 주체로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http://ntcp.kr>)

피에르 드 게테르(Pierre De Geyter)의 인터내셔널가



인터내셔널가 첫 판본, 피에르 드 게테르 작곡 (1871) - 출처 : 위키피디아

노동절은 잘 보내셨나요? 노동절에는 역시 인터내셔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불리는 인터내셔널가는 사실은 아직도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답니다! 원래는 당연히 만료되었을 줄 알고 -- 많은 분이 익히 아실 만한 일본 그룹 “소울플라워모노노케서밋” 밴드의 개사 부분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앞은 자리에서 절로 엉덩이가 들썩이는 이 신나는 버전은 가사 역시도 무척 신나요. 원래 일본 인터내셔널가를 약간 개사해서 “춤을 춥시다~ 노래합시다~ 인터내셔널한 축제예요~” 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내셔널가를 검색하다가 “원곡자인 피에르 드 게테르 Pierre De Geyter” 가 저작권 관련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산주의자였던 그는 저작권 행사에 부정적이었지만, 인터가가 점점 유명해지자 피에르의 형제 아들 프Adolphe De Geyter가 1901년부터 저작권을 행사하고 돈을 벌어들였고, 이에 피에르는 1904년에 소송을 걸었지만 1914년에 결국 소송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에

아돌프는 자살을 했고, 피에르에게 내가 사기치는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주변인들의 압력으로 그랬던 거라고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피에르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1922년 저작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 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뒤늦게 글을 읽고 얼마나 슬펐을까, 너무 슬프네요. 그런데 결국 되찾은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1932년 그의 죽음 후 프랑스에서도 그의 이름은 주로 저작권 소송 관련해서 남았대요. 이럴 수가ㅠㅠ 불쌍해 죽겠습니다.

전쟁 등을 이유로 그의 저작권은 2017년에 만료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국가마다 저작권 만료 기간이 달라서, 한국에서는 저작권 프리입니다. FTA 체결되면 다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원문적인 불어 페이지²¹가 있네요. 그리고 더 많은 인터내셔널가는 The Internationale²²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회색 시대- Bootleg / Mash-up



블론디라는 미국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의 베스트 앨범에 “Rapture Riders” 란 노래가 실려 있어요. 원곡은 Rapture인데, 베스트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실린 랩처 라이더스는 블론디의 원곡에 도어즈의 “Riders on the Storm”의 보컬만 입힌 것이라, 팬서비스로 실은 노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 노래의 원곡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블론디/도어즈의 원곡이 아니라, 그 둘을 섞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낸 원곡자는 영국의 ‘Go Home Productions’로 알려진 마크 비들러(Mark Vidler)였습니다.

21 http://www.petitesbelgiques.be/fr/en_fives.htm

22 <http://www.hymn.ru/internationale/index-en.html>

마크 비틀러는 2002년부터 많은 매쉬업을 만들어왔는데, 특히 이 노래 “랩처 라이더스”는 블론디와 도어즈 양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심지어 블론디 앨범으로 새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어느날 마크 비틀러에게 이메일이 와서 블론디의 싱글을 작업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메일로 작업하느라고 블론디의 보컬 “데비 해리”를 만나진 못 했다고 ㅎㅎ 하지만 콘서트(?) 뒷풀이에 DJ로 초대받아서 결국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²³은 “유명인과 함께 청중을 얻고 싶으면 소프트웨어를 훔쳐서 섞어버리라”고 합니다. ㅎㅎ

다운로드 페이지²⁴에서 이 외에도 많은 곡과 앨범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구요. 베스트 앨범에 해당하는 “This Was Pop (2002-2007)”를 꼭 들어보세요. 여기 실린 마돈나와 섹스 피스톨즈 노래 부틀렉 역시 양측 뮤지션에게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이후 새로운 작업은 없지만, 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는 시도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어요. GYBO²⁵같은 사이트는 음악을 부틀렉/매쉬업하는 방법과 완성된 곡을 나누고, 그 중 최고의 음악을 뽑기도 합니다.

렉애플레이.넷

"우리는 뮤지션과, 라이브와, 공간과, 술을 중시합니다"

2009년 11월에 오픈했으니, 알만한 분들은 이미 방문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렉애플레이.넷은 음악 비디오 블로그입니다. 인디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간단한 현장 스토리와 함께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음악을 팔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나눕니다.

23 <http://www.guardian.co.uk/music/2005/nov/20/3>

24 <http://www.gohomeproductions.co.uk/downloads.html>

25 <http://www.gybo5.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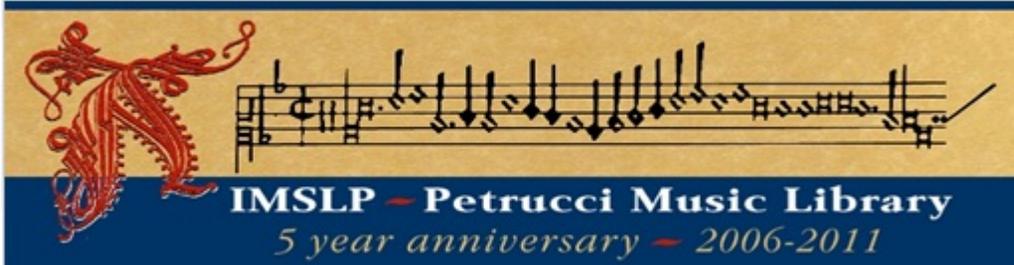


홈페이지에 이곳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렉앤플레이의 작업물은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CCL) BY 라이선스로 공개됩니다. 즉, 원저작자 표시만 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재가공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지한 것은 아닌 듯 한데,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다고 하네요. 이들은 영상을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접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게을러서’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ㅋㅋㅋ뭐..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올라온 영상과 음악들은 다 멋집니다!

렉앤플레이.넷 : <http://recandplay.net/>

국제 악보 도서관 프로젝트 (International Music Score Library Project, IMSLP)

"모든 사람은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누구에게나 무료로 악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 악보 도서관 프로젝트 (International Music Score Library Project, IMSLP)’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악보와 더불어, 자신의 음악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한 동시대 작곡가의 악보를 모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또 하나의 목표는 작곡을 넘어 (예를 들어 어떤 음악에 대한 분석과 같은)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악보 저작물의 도서관인 페트루치(Petrucci) 음악 도서관, 다양한 음악 관련 주제를 다루는 IMSLP 저널,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용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페트루치 음악 도서관에는 2011년 8월 현재, 41,118개의 음악 저작물, 101,762개의 악보, 2,705개의 음반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음악을 등록하고,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는 등의 모든 작업들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음악 영역의 위키피디아라고 할 수 있겠죠.

작곡가, 장르, 멜로디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국적별로도 검색할 수 있는데, 현재 73개국의 작곡가가 등록되어 있지만 ‘한국’이라는 카테고리는 보이지 않는군요. 아쉬운 일입니다.

국제 악보 도서관 프로젝트 홈페이지 : <http://imslp.org/>

교과서 독점깨기 위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



미국의 대학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교과서 가격은 다른 상품의 인상율에 비해 4배나 높게 올랐다고 한다. 이는 영화, 음악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출판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년 쯤 전에 시작된 “도서관 해적” 프로젝트 (<http://librarypirate.me/>)는 협업적 방식으로 교과서 파일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출판 시장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도서관 해적 프로젝트 운영자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전통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사적 도둑질에 대한 반대를 선언할 때” 라고 말했다.

Free Textbooks For Students Will Break Greedy Monopo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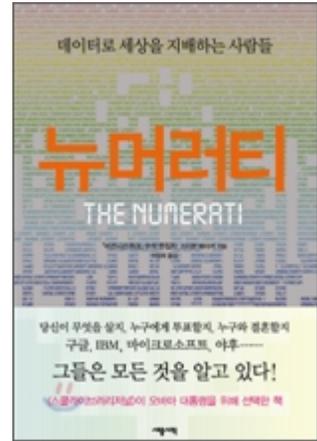
<http://torrentfreak.com/free-textbooks-for-students-will-break-greedy-monopoly-110816/>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뉴머러티 :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뉴머러티』

스티븐 베이커 저/ 이창희 역. 세종서적, 2010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직장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수집된다. 분석 대상은 작업 패턴, 소비 패턴과 피드백은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아우른다. 그들은 확률의 세상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을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연인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0과 1을 넘어선 현실 세상에서 누군가를 테러리스트일 ‘확률’로 추정하는 일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뉴머러티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는 노동자의 머릿속까지 숫자로 환원하고, 거 추장스러운 ‘따개비’ 소비자를 차별하려고 궁리중이다. 그러니 저자는 “우리도 그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과/함께 싸워야 한다” 고 말한다.

사이버-맑스

: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사이버-맑스』

닉 다이어-위데포드 저/ 신승철·이현 역, 이후,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은 기술에 친화적이고 동시에 적대적이다. 진보넷은 한국 인권, 노동, 사회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검열과 감시 기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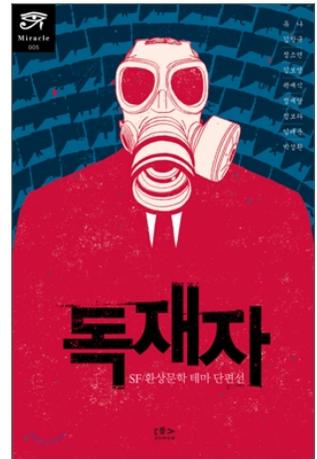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로 보자면 모순적인 두가지 태도가 상존하는 것이다. 근 십년 전에 출간된 책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1998년 진보넷 출범 이후로부터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이러한 긴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배경 하에서 고안되었고 선택되었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거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표현 수단을 제공하였다. 한때 해방구였던 인터넷이 지금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억압적인 각국 세계 정부가 가장 공들여 검열하고 감시하는 매체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저들의 틈새를 공략하여 우리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들을 관통하여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대안사회’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그 전망을 공유하는 연대이다.

독재자

『독재자』

듀나 외 8인 저, 문학에디션 뿔, 2010

과학소설 SF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영감을 준다. 하나, 꿈으로만 꾸고 있는 다른 세상이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둘,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현실을 극단까지 밀고 갔을때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현실의 어떤 측면은 우리에게 ‘독재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다. 이 책이 묘사하는 독재자의 모습은 인터넷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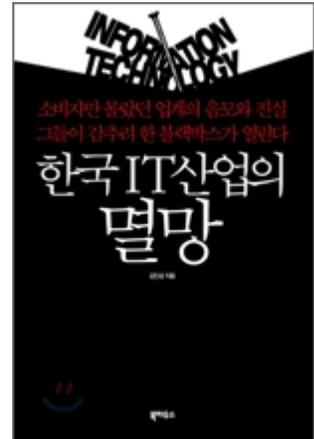
검열하고 성분인증이 된 자들에게만 인터넷 사용을 허락하거나, 인터넷을 개방하려는 ‘인폐분자’를 처벌한다(<개화>). 혹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제하고, ‘조정밀 입체영상’이니 ‘5D’니 하는 첨단기술론을 동원하여 담론을 통제한다(<신문이 말하기를>). 물론 사람들은 그래도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으며 사랑을 나눈다. 그 대목들이 특히 읽을 가치가 있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한국 IT산업의 멸망』

김인성 저, 북하우스, 2011

인터넷에 대한 책은 좀 있지만, 한국의 통신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비판적으로, 대중적으로 쓴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국 IT산업의 멸망>이라는 책을 볼 수 있게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포털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이슈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도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폐쇄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IT 산업이 폐쇄와 독점에서 벗어나 ‘개방’과 ‘표준’에 기반한 문화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개방과 표준이라는 철학에서부터 웹표준의 준수,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망중립성의 준수와 IPTV망의 오픈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저자의 입장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이제 IT에 있다’거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IT 기업의 성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처럼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플래티나 데이터

『플래티나 데이터』

히카시노 게이고 저, (주)서울문화사, 2011

“앞으로 틀림없이 모든 것이 관리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위조 카드, 가짜 이름, 위조 여권. 어떤 것을 위조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 살아 있는 한, 유전자는 위조할 수 없지요. 그걸 국가에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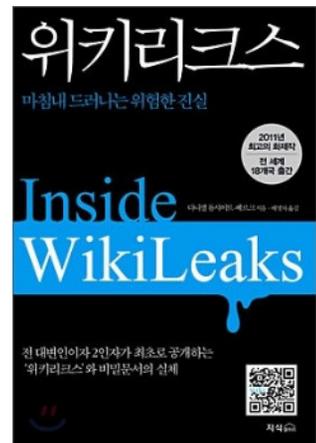
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지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자유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지난 3월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 철거민들의 DNA가 채취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집단적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뿐 아니라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는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 파업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이 DNA 채취 대상이 된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DNA 채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모순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앞으로 이 땅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말살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임을 당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걱정거리인가보다. 잘 알려진 추리소설 작가인 히카시노 게이코가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며 섬뜩한 DNA 데이터베이스 지배 사회를 묘사하였다.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지난 6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위키리크스 :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

『위키리크스 : 마침내 드러나는 위험한 진실』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크 저/ 배명자 역, 지식갤러리, 2011

이 책의 저자는 위키리크스의 전 대변인이자, 지금은 위키리크스를 나와 ‘오픈리크스’ 라는 새로운 내부고발 사이트를 준비 중인 인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위키리크스의 대표로 주목받고 있는 줄리언 어산지를 만나고, 위키리크스에 결합하면서부터 이후 진행된 주요 사건들, 위키리크스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어산지와 그의 갈등 등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중간 중간 저자가 위키리크스에 대해 어떤 점에서 비판적이었고, 어떤 취지에서 오픈리크스를 만들었는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책이 위키리크스가 현대 정보사회에 던진 함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그가 어산지와 그의 갈등 끝에 위키리크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위키리크스 내부의 맥락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가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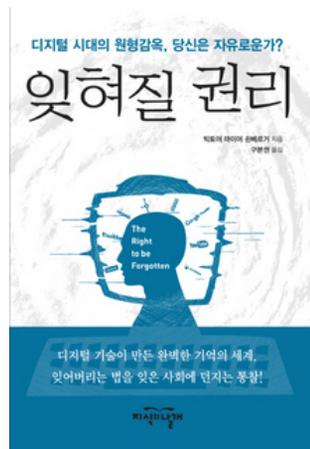


잊혀질 권리[Delet] :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잊혀질 권리[Delet] :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저/ 구본권 역,
지식의날개(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권력과 시간의 접점에서 영원한 기억은 공간적 시간적 원형감옥이란 유령을 만들어내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영국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일이 따분해”라는 글을 올려 실직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설사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남은 나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따라다니는 생각을 곰곰히 해보면 끔찍한 일이다. 내가 올린 글과 그림 뿐 아니라 나를 언급한 모든 글과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잊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 내가 잊어도 그 누군가는, 그리고 사회는 그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 내려 할 것이다. 이 영원한 기억은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각종 감시카메라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모든 디지털 기계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저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원한 기억을 욕망해 온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억 장치들을 만들어왔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역전된 지난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의 정보 통제권의 상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방법은 있냐는 것이다. 저자는 몇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보만료일’이란 망각의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컴퓨터가 만료일에 도달한 파일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지속되는 기억’에서 인간이 ‘통제하는 망각’으로 기본값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저자 자신이 언급한대로 이 제안이 완전한 묘책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망각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출발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국 20여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번 출범식과 기획포럼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진보넷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 적극 참여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전자주민증 국회를 통과될 뻔!

얼마전에도 개인정보 3000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전자주민증”입니다. 주민등록증 표면에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칩” 속에 넣어 공공기관과 시중의 수십만대 “판독기”에서 “빔”하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2011년 2월 15일 <전자주민증 반대 기자회견>

지난 21일과 22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이 통과될 뻔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르는 새 말이죠! 다

행히 6월 국회를 간신히 넘겼습니다만 하반기 국회를 안심할 수 없습니다. 1996년부터 계속된 국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행정관료들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처럼 전자주민증이 “통합신분증” 이 아니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정보가 “통합된 것이나 다름없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선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 일반화된 오늘의 교훈이구요.

전자주민증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대 의견을 트위터, 아고라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게시판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사회적제작 2호, 잼다큐강정



<Jam docu 강정> 예고편 中

시민들의 기금을 모아 영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영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제작' 실험! 사회적 제작 1호인 <뉴타운 켈쳐파티>는 6월 30일 현재, 353명의 개인과 16개 단체가 '독립영화 희망씨앗'으로 참여하여, 총 14,52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제작비 모금 목표액의 3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제작 실험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립영화가 사회적 제작 2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잼(JAM)다큐 강정>. 이 영화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하동하, 경순, 김태일, 홍형숙 등 많은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강정마을 투쟁에 연대하고, 다큐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급박한 사회이슈에 독립영화인들이 결합하여 이를 영화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강정

마을의 투쟁을 지지하시는 분들, 잼다큐의 제작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잼다큐강정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jamdocu>

진보랩

후후후.. 모두들 진보랩 업데이트! 보고 계신가요? 독립네트워크팀의 활동을 공유하고 진행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보랩을 열었지요. 공부방에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매일 들어오시긴 어렵겠지만 구독 기능 등을 통해 업데이트 확인하시고 의견 많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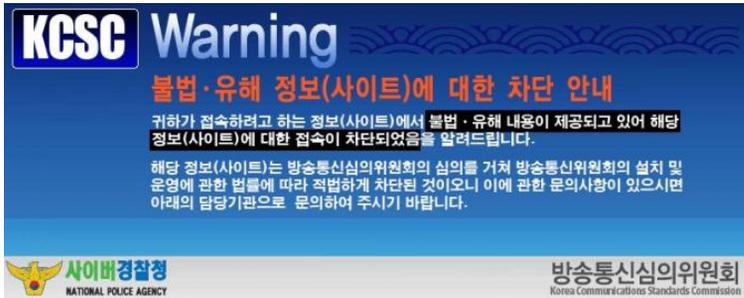
앞으로 독립네트워크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 상황을 진보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댓글과 오류 수정 등 지켜보는 분들의 소소한 참여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뻐요!!!! 앞으로 무궁한 참여가 가능하게 어서 완비해야 할텐데 말예요.

진보랩 사이트에서 오랜 기획 단계를 거쳐, 아직도 기획 중인 -- KPD의 기획안도 보고 의견 주세요. KPD는 예전에 서비스했었던 진보단체 디렉토리입니다. 여러 이슈별로 어떤 단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아보는 거예요. 꼭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모임이나 연대체 등 다양한 단위들을 포괄할 거예요. 기획은 계속 추가/변경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없던 컨셉으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 활동가들이랑 연락하기 좋게 하는 걸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ㅅ-;; 요즘 진보넷이 자꾸 그러하듯 드루팔(Drupal) 7으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검토하고 고치고 만들 게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 빨리 기획 끝내고 빨리 제작에 들어갔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MB18nomA 차단 사건, 점입가경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기가 불순하다"는 발언이 횡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점입가경인 점은, 이날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4일 공개한 6월 20일 회의록에서 박만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고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자를 빼 것입니다. 2MB18nomA 계정을 차단한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는지 여부를 현재 다루고 있는데 딱 그 단어를 빼버린 거죠.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고쳤을까요?

진보넷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삭제된 2MB18nomA 계정을 살려주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겠지요.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라!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나도 모르게 찍힌 내 사진을 보실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경찰의 채증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7월 19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5년치만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과 시스템 운영을 반대합니다. 불법 채증이 근절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

지난 7월 5일, 정보공유연대의 열세번째 ‘이달의 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두리반 투쟁을 계기로 모이게 된 홍대 인근의 인디 음악인들이 인디음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면서 현재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달의 토크에는 조합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발, 권용만, 장성건님이 토크인으로 참석하여, 인디씬의 현실과 조합을 건설하게 된 문제의식을 차분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http://ipleft.or.kr/node/2666>)를 참고하세요.



사회적 후원 시스템 준비 중!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독립네트워크팀은 KPD를 한창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구요. 그보다 현재는 사회적 후원시스템 구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구체적인 사업(4대강 저지)이나 프로젝트(예를 들어 독립영화등 대안적 콘텐츠 생산)별로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 단체 후원해 주세요를 지양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 또는 대안적 창작물 생산물에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보넷은 지난 4월부터 뉴타운컬처파티 제작후원, 두물머리를 향해 싸라, 100일간의 잼(JAM) 다큐멘터리 강정 제작단 모집, 홈리스행동 중고승합차 마련 프로젝트 ‘홈리스 차차차’ 등 사례를 발굴하여 실험해왔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실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에 책임을 묻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7월 26일 발생)!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최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기관에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della골뱅이 jinbo.net



둘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진보넷이 언론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민간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회의자료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온 관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분량이 많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쓰레기 시멘트, 일명 ‘사무라이 조’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해 왔었거든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방통심의위의 비공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통령 비관을 검열하는 관행도 개선되기를 바래~

방통위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에 분노합니다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의 요구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한총련 홈페이지²⁶에도 이적표현물이 게재되어 있다며 ‘이용해지’ 하라고 진보넷에 통보해 왔습니다. 진보넷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마침내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인권침성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 명령은 여러가지로 부당합니다.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

26 <http://hcy.jinbo.net/>

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 명령이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사이트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캡인가 로보캡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FTA는 에이즈 감염인을 비롯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로 인한 특허권 강화와 복제약 생산의 위축은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채증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쯤되면 아이캡이 아니라 로보캡대회로 부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폭력을 고발하는 동영상은 찍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았네요. 그 중의 하나, http://youtu.be/rFMkjk_7qEc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일탈을 꿈꾸는 모범생 "비파나" 회원님!

이번 달 뉴스레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신 “비파나” 회원님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 메일이 유독 눈에 끌려 재빨리 후원을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고 있는 모범생 “비파나” 회원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자기 소개라...떨리네요. ㅎㅎ 매일매일 일탈을 꿈꾸는 서른 다섯 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주로 모범생 계열이라며 노는 데 잘 안 끼워주고, 잘 못 끼어 드는...음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시간 약속도 웬만하면 잘 지키고, 하기로 한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범생 계열이 확실하네요. 하루에 8시간+@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벽돌 한 장 올려놓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구요, 집에 돌아와서 4시간은 아이와 씨름하면서도 쿨~~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지친 몸과 마음 달래기에.

6월, 진보넷에 회원가입을 하셨는데요. 진보넷에 후원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5월부터 진행된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네!!!!!!!!!! 진보넷 회원확대 캠페인에 확실히!!! 영향을 받았어요. 원래 메일 체크를 안 해 보는데 그날 따라 한 메일이 유독 끌려서 열었는데, 박래군 선배의 절절한 호소가 저를 잡아 멍겼습니다. 예전에 아래층 위층에 살던 사이긴 했지만 후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털럭 겁이 나더라구요. 진보넷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무조건 가입했습니다^^ 하하 사랑해요 진보넷!!!!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지켜주세요~~~



*사진은비파나회원님께서좋아하시는 사진입니다^^
원가선보통요요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프라인의 소통만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여기는 저에게는 정보인권이 아직 많이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지만 직업상(?)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정보 인권에 대해서 진보넷 만큼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곳도 없지요. 그래서 성명서나 보도자료가 나오면 공부하는 자세로 한 손에는 형광펜을 들고 한 손으로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본답니다.

최근 접한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이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일부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신문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검찰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폭행 건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만약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라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체포부터 했을까,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기 진술서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른 채 날인을 해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구치소 작은 방에서 한국인들에 둘러싸여 3개월을 보내면서 한국에 온 걸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했을까.. 억울한 마음, 분통터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의적인 “공권력”의 집행이 또 여러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네요. 빨리 좋은 세상 만들어야겠습니다.

혹시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있다면 어떤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동화책에 있는 그림 구경하기.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 생각을 하게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밤마다 의무적(?)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입장이 아니시더라도 참 많은 좋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앗, 그리고 저의 로망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 로망이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거였는데, 혹시 같이 하실 분 없나요? ^^ 요즘은 노래가 심하게 부르고 싶네요. 절대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 영향 받은 거 아님!!!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려요.

앤써니 브라운의 우리엄마, 돼지책... 완전 엄마편인 책을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보넷 회원들 중 엄마아빠인 분들에게만 해당 될까요?ㅎㅎ)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단체나 제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진보넷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밥도 씹씩하게 잘 챙겨 먹고, 몸도 마음도 튼튼하세요.

공무원 표현의자유 보장!을 외치는 오성희 회원님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오성희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성희님께 공무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및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에서 활동 중입니다.

최근 몇지계(?)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후원을 하게 된 계기라던지..^^

주변 많은 동지들이 진보넷 계정을 사용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해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상황을 듣고 그나마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동안이라도 함께하자 싶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서 관심 있었고 최근에는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인시위를 하거나 기고를 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비민주적, 독단적인 국가인권위의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인영 조사관(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한 데 이어 그 당시 강인영 조사관을 지지하며 같이 1인 시위 등 내부활동을 진행했던 직원 11명에 대해 7월 29일 감봉~정직까지 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침해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한국 내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조직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커녕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를 개혁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공무원노조는 물론 주변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우리사회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교조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2009년 7월의 시국선언 광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및 신문간지를 이유로 한 중징계 및 파면, 해임, 지난 2009년 말 국무회의, 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 토록 하면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2010년 1월, 2011년 6월 2차례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을 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중립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관건선거에 동원되는 것 등을 막음과 더불어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보장의 최대화를 위함인 ‘정치중립의 의무’ 를 빌미로 투표 이외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정부의 논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휘둘러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지 정부에 되물어야 할 듯 하네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첫번째 과제가 있다면?!

일각에서는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권, 정치기본권 쟁취도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조항 및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 역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격이 있는 나라로서 2년여 동안 불인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비준을 통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ILO, UN 회원국으로서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공무원들 역시 진정으로 국민의 공무원, 민중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을 혁신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접한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와 함께 하려고 부산에 당일 일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영도조선소 근처라도 가볼 요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않았고 알고 보니 경찰이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었다는 일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위참가자들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정부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시민 및 노동자를 인권보장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더욱더 화가났었습니다.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은 참 끝까지 진득하니 읽은 책이 많지않아 공유, 추천하기 어렵겠고,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Garden State라고 2004년에 잭 브라프 감독이 만들고 출연한 영화가 줄거리는 가물가물 하지만 영화음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영원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국제공공노련과 LabourStart 가 함께 “한국: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및 탄압 중단하라” 는 청와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한데 곧 한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

크 참고해주세요.

http://www.labourstart.org/cgi-bin/solidarityforever/show_campaign.cgi?c=1068

'주거권 운동' 하는 미류 회원님

“살기 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거죠.”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미류님의 답변 일부입니다. 얼마전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안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세워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넷 회원이자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님께 서울역 노숙인 퇴거방침 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책 한 줄 읽지 못했다는 미류님과의 소중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미류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류입니다.

어떤 계기로 진보넷 후원을 하게 되었나요?

좀 실용적인 이유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거권 운동을 하면서 함께 하는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한 메일링리스트가 필요했는데 진보넷 회원가입을 하면 메일링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입했어요. 그 당시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비스가 무척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관심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특히 주민등록제도 관련된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주거권 운동을 하다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민번호 명의도용 문제도 있지만, 주민번호가 사실은 노숙인들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당장 사회복

지서비스나 이런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주소지가 불명확하다거나 실종신고가 나거나..오히려 주민등록증이 장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제도는 부딪치게되는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요.

진보넷 블로그를 쓰고 계신데 특별히 진보넷 블로그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진보넷 블로그를 쓰게 되었어요.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게되면서 손으로 쓰는 일기가 어색해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주 우연히 진보넷 블로그를 보게 되어 시작을 했어요. 사실 다른 곳에 블로그가 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되었죠.

진보넷 블로그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을리가 없죠.(웃음) 저는 대단한 기능같은 걸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것들을 메모해 놓는 정도라.. 지금 진보넷 블로그에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로그 스킨을 자기가 직접 만들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조금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안의 노숙인을 강제퇴거시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7월에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노숙인 퇴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었고 황당했죠. 그래서 항의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하고 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들 서울역에서 못자게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러니까 8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을 8월 22일로 늦췄던 거죠. 방식도 구역사는 원래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신역사는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청소시간이라 문을 닫았는데 이것을 4시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 노숙인은 못들어오게 하겠다는 방침인거죠. 지금이야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새벽 4시 경은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대인데, 그 시간에 실내에서 자지 못하면 살기 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그런데 서울역이라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서울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예전부터 그랬고 당장 잘 곳이 없는..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역으로 찾아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네트워킹이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정보와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형성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역 인근에서 300

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날이 춥지 않으니 대부분 밖에 있어요. 안에서 자는 사람은 10명~20명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큰 충돌이 안생기는 것이구요. 서울역도 그런 걸 알고 지금 시기에 퇴거 방침을 내놓은 것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큰 문제이죠.

실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노숙인분들은 사실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노숙인들을 꼭 집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어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느껴요. 특히 그런 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강제철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거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누구나 내집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 보장하자라는 취지가 인권인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주거에 대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취약하고 살던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간단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새로운 주장이거나 새로운 요구라고 생각은 안해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드러낼것이라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집에서 함부로 쫓아내면 안된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거나 보장되지 못했던거죠. 법률을 통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어도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져야할 것들은 분명히 하는 것이 주거권운동인것 같아요.

강제퇴거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강제퇴거금지법은 용산참사 이후 준비되기 시작한건데, 우리가 개발하는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현장에서의 충돌이라기 보다 뿌리가 깊은 구조적인 문제인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폭력도 방지되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고 그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것들을 정하는 법을 만드려고 하고 있어요.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이 세계주거의 날인데 그 즈음해서 국회발의를 목표로 일만인의 서명을 모아서 국회발의를 요구하려고해요. 곧 서명운동 할 예정이니 진보넷 회원여러분도

서명 많이 해주세요.

혹시 시간이 날때 취미가 있는지?

시간이 날 때는 책을 읽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뒹굴거리기도 하면서 보내요. 요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책을 한 줄도 못읽는게 아쉬워요. 사실은 아침에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한달 넘게 못했어요.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집은 인권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엮은 책이에요. 아직 1쇄가 다 안팔렸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찾을 수도 있으니 1쇄가 절판 되기 전에 사서 읽어주세요^^

A photograph of a man with dark hair, smiling broadly. He is wearing a brown jacket and has a backpack strap visible on his left shoulder. The background shows a snowy outdoor area with a modern building featuring large windows and white columns. There are some evergreen trees and other people in the distance, some wearing winter gear.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festive, likely during winter holidays.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이슈&토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활동가들을 인터뷰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젝트! 바로 이슈&토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슈&토크 3화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폰트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님께서 폰트저작권이 무엇인지,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만약 폰트 이용으로 제작업체에게 경고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슈&토크 보고 계시는거죠?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슬프답니다ㅠㅠ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슈&토크 4화도 곧 나올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이슈&토크 1화 <인도-EU FTA,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토크 2화 <패킷감청이란 무엇인가?>

이슈&토크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보운동 ActOn' 제13호우편 발송 완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3호, 2011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진보넷 식구들은 우리 회원님들께 ‘정보운동 ActOn’ 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우편발송 작업을 했답니다. 봉투에 주소 스티커를 붙이고 책 넣고 우편번호별로 묶고~! 순서대로 척척 빠른 손놀림으로 우편발송 작업을 할 때마다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뿌듯해요!하하

독립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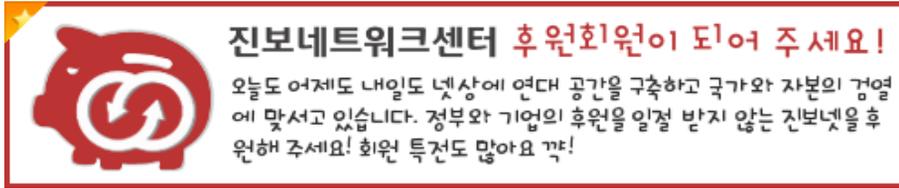
다들 아시나요?^^ 기술팀 상근자 모님이 지난 달에 그만 두셔서, 모님없는 첫달을 보냈습니다 ioi 새로운 모님의 인생에 즐거움이 넘칠 바래요, 그렇지만 진보넷에서 자원활동 잊지 말고 꼭 하시구.. 그런데 새 상근자 지원을 아무도 안 하네요?! 이게 웬일?! 어떡하죠??



그래서 현재 팀 구성은 운영자(명야핑)+디자이너(동구리)+개발및서버(규만) 이렇게 3인이 하고 있어요. 이 인원으로 새로운 서비스 런칭도 하는 거구요. 그런데 개발자가 1명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네요...< 그래서 원래 하는 일도 다 잘 못 하는 마당에 남은 2인도 php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유지/보수는 둘이 직접 하려구요.

그런 사정이니 앞으로 php 공부에 도움 줄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바랍니다< 8월은 모님 없이 헤쳐나가면서 KPD 기획하고 스페머들이랑 싸우며 보냈어요. 현재 먼 그림으로 변화하는 웹 환경에 맞춘 진보진영의 컨텐츠 유통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진보넷 기술팀은 어떤 모델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아이디어 언제든 주세요! 진보랩의 의견게시판을 통해 어떤 이야기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제안이든 달갑습니다 현재 아무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진보넷 후원 요청 메일 포터 제작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진보넷 후원회원 모집 널리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8월은 회비 미납금 수납 기간입니다. 회원호스팅 받고 계신 회원님들 중 밀린 회비가 있으시면 Right Now!!! 저희 배고파요ㅠㅠ

정보인권 영화제 계획 중인 진보넷!

요즘 진보넷은 정보인권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화 찾아 삼만리(?)하다가 드디어 2편의 영화를 찾았답니다!! 상영 허락까지 받았어요!_< 어떤 영화일까요?! 궁금하시죠? 곧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에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보인권 관련 영화가 많지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회원님들께서 정보인권 관련 영화 중에 보고 싶은 영화나 “이 영화 상영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슈앤티크 4화에서는 태준식 감독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1일 KBS스페셜에서 방송된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태준식 독립영화감독의 <당신과 나의 전쟁>, <낙인> 두 작품이 게시없이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태준식 감독에게 들어봅니다. 이슈앤티크 4화 보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536>